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가상자산·STO 취급 안 한다

<증권형 토큰>

추진위 “증권형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조각투자 상품 거래로 변경”

명칭도 ‘디지털상품거래소’ 될 듯 오늘 전체회의서 구체적 논의 지속



지난달 19일 열린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원회' 발족식.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청사진이 180도 뒤바뀔 전망이다.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심했던 가상자산이나 STO(증권형 토큰)는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증권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디지털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든다. 거래소 이름 또한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아닌 '디지털상품' 거래소로 변경해 추진한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김상민 위원장은 18일 <부산일보>에

“추진위 출범 이래 한 달 간 분과별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논란이 많은 가상자산·STO 대신 다양한 ‘디지털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들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명칭 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아닌 ‘디지털상품거래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출범 이후 첫 전체 회의

19일 서울에서 열고 변경된 거래소 청사진의 공유와 향후 일정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새 거래소의 새로운 취급 상품이 될 ‘디지털상품’의 개념은 쉽게 말해 ‘조각투자 상품 중 증권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 중 금융당국이 증권형으로 분류한 것은

‘보유자에 대한 수익 배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한해서”라며 “(배당 등) 수익 배분이 없거나 배분할 때 실현할 경우 증권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대표적 조각투자 상품인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 투자자에게 음원 사용료 중 일부를 정기 수익으로 배분한다. 이러한 경우 증권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각투자자의 형태로 편입할 경우 선박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시세 차익은 누릴 수 있지만 정기적 수익 배분(배당)은 없다. 이러한 조각투자 형태는 증권형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부산시와 추진위가 돌린 거래소 취급 상품을 ‘디지털상품’으로 변경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특히 금융위가 STO를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상자산+STO’를 동시에 취급하겠다는 부산 거래소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일 경우 기존 증권시장에서만 STO를 취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기도 길어지면서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수익도 크게 줄어든 형국이다.

이에 추진위는 차라리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 받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소로 ‘업종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증권형이 아닌 디지털상품을 거래할 경우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규만 준수하면 될 뿐, 새로 생겨날 여러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도 ‘디지털상품’이 가상자산 못지않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서 ‘디지털상품’이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으로 떠오르고 그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가상자산이나 STO의 거래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현재 구상하는 거래소가 출범해 안정화되면 이후 취급 상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수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STO 가이드라인 또한 금융당국의 의견일 뿐 이후 입법화 과정에서 무엇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대전환을 위해 올바른 방향인지는 다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다른 방향의 입법화 여지도 남겼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이러한 변경안에 대해 “추진위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부산시와 추진위가 함께 충분히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이마트 ‘설날 온가족 먹거리’ 행사

이마트는 25일까지 ‘설날 온가족 먹거리’ 행사를 열고 사과·배, 문어, 육전용 고기 등 제수용품부터 계절 수산물, 삼겹살, 킹크랩 등 먹거리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부산 레미콘 가격 10% 인상 합의

m당 8만 7600원 → 9만 6500원
건설업계, 분양가 상승 우려 목소리

부산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가 레미콘 가격을 10%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레미콘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18일 부산레미콘공업조합(부산레미콘조합)에 따르면 m당 8만 7600원인 현재 레미콘 가격이 1월에 4400원을, 5월에 4500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대한건설자재협의회와 합의했다. 5월 이후 레미콘 가격은 m당 9만 6500원으로 기존에 비해 10.2% 오른 가격이다.

당초 부산레미콘조합은 m당 1만 200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건설자재협의회는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m당 420원씩 총 8400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합의가 완료된 수도권과 같은 수준이다. 부산레미콘조합은 지난 1

7월 이 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협상을 결렬시켰지만 18일 긴급회의를 통해 받아들여기로 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계 입장이 많이 반영된 합의지만 업계는 핵심 자재인 레미콘이 10%가량 인상되고 다른 원자재들 가격이 올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2022년 11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48.70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 2년 전과 비교해서는 23.6% 상승했다. 이 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에 대한 물가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통계다.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분양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택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동향’에 따르면 부산지역 지난해 12월 분양가는 m당 589만 6000원이었다. 이는 2021년 12월 508만 1000원에 비해 81만 5000원가량 상승한 수치다.

장병진 기자 joyful@

부산 13개 구·군, 예비비 과다 편성 ‘지방재정법’ 위반

기장군과 남·동래·연제구 등 6곳 예산 대비 편성 비율 전국 10위권

부산 1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3곳(중구·사하구·강서구)을 제외한 13곳이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과다 편성으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 상위 10위권에 남구를 비롯해 기장군, 동래·연제·수영·북구 등 부산지역 6개 지자체가 이름을 올렸다.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 규모를 각 예산 총액의 1%(100분의 1) 이내로 제한해 재·관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 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8일 ‘지방재정365’ 데이터를 가공해 나라살림보고서에 발표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시·기초)의 예산총액(555조 4591억 3600만 원) 대비 예비비 예산액(5조 2723억 7800만 원) 비중은 0.95%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액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1% 비율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모두 94곳에 달했다. 부산 남구는 예산총액 7919억 2400만 원 가운데 예비비가 869억 8700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10.98%를 예비비로 편성했다. 전국에서 예비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울산 울주군(10.3%), 부산 기장군(9.83%), 서울 중구(8.39%), 부산 동래구(7.49%), 경북 안동시(7.07%), 부산 연제구(6.78%), 부산 수영구(6.67%), 부산 북구(5.93%), 경북 영주시(5.52%) 순이었다. 금정구(5.27%), 사상구(3.80%), 서구(2.31%), 동구(2.2%), 영도구(2.04%), 해운대구(1.66%), 부산진구(1.03%)도 ‘예비비 비율 1%’를 초과했다. 부산 본청은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이 0.86%로 ‘1% 이내 제한’에 부합했다.

울산은 울주군을 비롯해 동구(2.74%), 북구(2.64%), 남구(2.12%), 중구(1.08%) 등 모든 기초지자체가 예비

비 1% 제한을 초과했다. 울산 본청은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이 0.36%에 그쳤다. 경남에서는 의령군(3.37%), 산청군(3.10%), 김해시(2.85%), 함양군(1.79%) 등이 예비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예비비는 용도에 맞게 활용됐다면 연중 추정(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타사업에 배정되면서 당초예산 편성액에 비해 감액됐어야 하며, 긴급한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경우 당초예산 금액이 유지됐어야 한다”며 “당초예산에 비해 회계연도말에 예비비가 증액된 경우,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헌수 기자 songh@

르노코리아, 지난해 유럽 10만 대 수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XM3, 꾸준한 수출 성장세 주도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지난해 유럽 지역에 약 10만 대 수출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해당 지역 최대 수출 물량을 달성했다.

르노코리아차는 지난해 쿠팰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XM3’(수출명 르노 아르카나) 9만 3251대, ‘QM6’(수출명 르노 폴레오스) 5088대 등 유럽 지역에 총 9만 8861대를 수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르노코리아

차의 전체 수출 물량 11만 7020대의 84.5%를 점하는 실적이다.

르노코리아차는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인 유럽 시장 판매를 시작한 XM3의 선전에 힘입어 2021년에 유럽 시장 수출 첫 5만 대 이상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10만 대 가까운 실적으로 유럽 수출 기록을 더 끌어올렸다. 지난해 XM3의 유럽 국가별 판매량은 프랑스(3만 3467대) 스페인(1만 3936대), 영국(8325대), 독일(7785대), 이탈리아(7139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XM3는 지난해 유럽 시장 외에도 호주(2503대), 일본(1264대) 등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5033대, 남미 지역 882대 등 전세계 54개 국에 수출했다.

2020년 7월 칠레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XM3는 2020년 909대, 2021년 5만 6719대, 2022년 9만 9166대 등 누적 수출 실적 총 15만 6794대로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XM3 E-테크 하이브리드 모델 수출은 2021년 3만 701대, 지난해 5만 8778대로 더욱 가파

른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이 같은 르노코리아차의 수출 실적은 XM3가 유럽 시장에서 전문가와 실무자들로부터 호평을 이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동차 전용선박 확보난과 높아진 수출 물류비로 인해 성장세가 꺾일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르노코리아차협력업체협의회는 생존을 위한 수출 지원 호소문을 최근 발표한 바 있으며, 르노코리아차는 정부, 유관 기관과 함께 타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배동진 기자 djbae@

(주)대성문, 국토교통부 ‘리츠 인가’ 통과

부동산 사업 영역 확장 ‘박차’

부산 지역 증권 건설회사인 (주)대성문이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인가를 통과했다.

대성문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과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한다.

리츠는 인가를 받은 대성문은 부동산의 취득·관리·처분,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 임대차, 증권의 매매 등 사업 활동을 폭넓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영인인가를 받은 ‘우리대성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우리대성문리츠)’는 자본금 63억 원에 총 사업비는 704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대성문이 건설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1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성문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부산 영도구 드림아파트와 남부민동 드림아파트 등을 향후 이반 리츠에 포함시켜 총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대성문의 리츠 운영 파트너는 우리금융그룹의 우리자산신탁으로 알려졌다. 우리자산신탁은 지금까지 오피스, 대토사업, 물류센터를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를 주로 추진해왔으나, 이번엔 대성문과 처음으로 임대주택 리츠 분야에 진출하게 됐다.

대성문 관계자는 “최근 서울지역에서 진행한 LH 청년 매입임대 50가구 모집에 2만 903명이 신청해 4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안전성이 담보된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등 주택시장 수요가 변화하고 있어 공공성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금리 & 환율 | 해외송금, 환전은 역시! BNK 부산은행

◇국내외 금리·금값(18일)			(단위:%)			
종류	금일 시세	전일 대비	◇원화환율(18일)			
국고채(3년)	3.390	-0.094	통화	기준율	살때	팔때
국고채(5년)	3.353	-0.093	미국 달러	1237.40	1259.05	1215.75
회사채(3년)	3.679	-0.064	일본100엔	945.34	961.88	928.80
CD(91일)	3.70	-0.04	EUR 유로	1334.54	1360.56	1308.52
통안채(1년)	3.520	-0.061	중국 위안	182.61	193.57	171.65
한은기준금리	3.25	0.00	영국 파운드	1520.64	1550.29	1490.99
국민주택1종(5년)	3.517	-0.106	캐나다 달러	925.20	943.24	907.16
TERM SOFR(3개월)	4.6329	0.0010	스위스 프랑	1341.14	1367.29	1314.99
미국 TB(30년)	3.64	0.03	홍콩 달러	158.14	161.22	155.06
금 현물(3.75%론/월)	284.625	-1.125	호주 달러	866.06	882.95	849.17
			인니 100루피아	8.20	9.18	7.22
			태국 바트	37.40	39.64	35.16

* 송금 가격은 한국거래소 KRX공시가격 기준. * 미국 달러/일본엔 130.89 (자료:부산은행)